

# 한중FTA 추진과 충남도의 경제통상 전략

글 · 양평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 한중 FTA의 추진 과정

한·중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의 기간 중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로부터 10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는 2년여에 걸친 민간공동연구와 3년 반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쳤다. 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2년여에 걸쳐 민감 품목의 처리 방식과 보호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정부 간 사전협의를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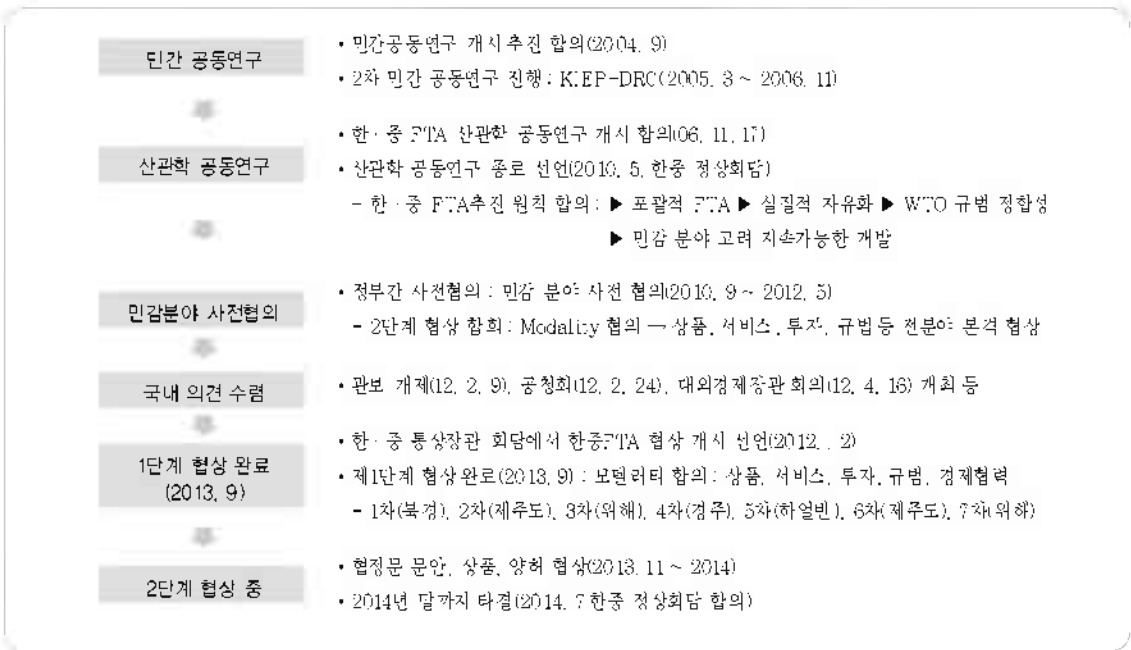
정부 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단계 협상에서 개방 수준, 포괄 범위 및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 등을 포함하는 협상의 기본 틀인 모달리티(modality)를 합의하였고,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모달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안 및 구체적 상품 양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이 탄력을 받았다. 2013년 9월 초 개최된 7차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는 모달리티(Modality)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러한 기본합의 따라 2013년 11월 이후 한중FTA 협상은 2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 12차 까지 협상이 진행되었고, 양국 정상과의 연내 타결 합의에 따라 협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한중 FTA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점 사항 등을 중심으로 충남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중 FTA 1단계 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

2013년 9월 초 개최된 7차 협상에서 제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분야, △경제협력 분야의 모달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였다."

1)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1단계 협상 결과(2013), pp. 2-4.

(그림 1) 한중 FTA 추진과정



먼저,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 수 기준 90%, 2012년도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고, 추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으며,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 및 기술표준(TBT)과 관련된 협상 원칙에 합의하였다.

둘째,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하였다. 특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규범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 경쟁분야의 투명성 제고 및 당국 간 협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환경보호 의무 및 환경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넷째,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에너지·자원, 철강,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농수산협력(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분야, 식품 안전 및 위원회 설치 등)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다.

1단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상품분야 모델리타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국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효과이외에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 한중FTA 2단계 협상의 과제

중국의 FTA 추진 전략에 있어 한·중 FTA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제1단계 모델리타 협상에서는 한·중 FTA는 민감분야를 보호하면서 포괄적이고도,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 온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모델리타를 기초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과 시장개방 양허 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 중이다. 한·중 FTA 추진에 있어 극복해야 할 이견이 많아 현재 진행 중인 제 2단계 협상도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중 FTA가 한·중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 민감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되 양국 간 교역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를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는 변하고 있는 한중 간 분업구조와 국제통상환경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중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기제이다. 한·중 FTA 추진에 있어 각자의 민감 분야 보호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실익이 없는 FTA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감 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양국 간 교역 확대, 특히 우리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세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품 분야의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에 있어 한·중 간 교역구조의 특성,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 중국의 수입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간 분업구조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 즉시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를 점차 내수용 수출 중심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2)</sup>

2)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입 중 내수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33.7%로 대만의 27.4%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일본(51.7%), 미국(66.7%), 독일(77.9%)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1)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상품 구조

(단위: %)

가공단계	대중국 수출상품 구성				일반무역 비중 (2012년)	
	2006	2010	2011	2012		
일차상품	0.5	0.5	0.7	0.6	82.8	
중간재	소 계	77.9	75.5	75.9	71.5	33.7
	산업용 원자재	32.8	30.2	30.2	29.0	52.3
	부품	39.5	41.1	39.3	42.8	22.3
	연료 및 윤활유	5.6	4.2	6.5	5.7	24.1
최종재	소 계	21.5	23.6	23.4	21.9	29.5
	자본재	18.0	21.1	20.0	18.6	26.2
	소비재	3.5	2.5	3.4	3.3	53.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수출입 (DB: 중국해관 통계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경쟁이 심한 제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통해 중국과 대만간의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관세인하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전환효과(switching 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 분야 협상에 있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대만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품목, △한국과 일본 간에 경쟁이 치열한 품목, △한국과 대만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품목, △한국이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군에 대해 즉시관세 철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최근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 사항과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험의 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 분야 개방방식에 있어 상하이 자유무역 실험구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전 내국민 대우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투자 분야 협상에서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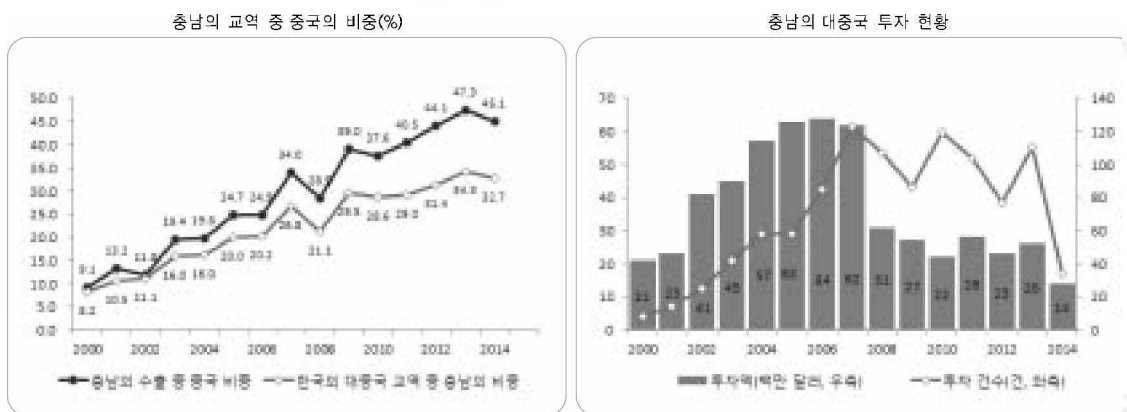
넷째,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의 협상분야이고, 서비스 산업은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홍콩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와 대만과의 ECFA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WTO 개방 수준보다 높게 개방하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서는 6대 부문 18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고, 투자자 자격요구, 지분 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의 규제조치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한중FTA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의 CEPA, ECFA, 그리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개방 내용을 감안한 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중 FTA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한·중 FTA는 양자간 FTA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RCEP)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의 대중국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

중국은 충청남도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전체 교역의 34.3%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1%에 달한다. 더불어 중국은 충남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가로서 2014년 6월 말 현재 총 641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투자액은 11억 1,700여만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한·중 FTA는 충청남도의 대중국 통상전략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의 하나이다.

〈그림 2〉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2014년은 실적 중 무역은 1~7월, 투자는 1~6월 실적임.)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충청남도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기술력 향상, 국내 생산시설 확대, 한국기업의 중국내 생산 확대와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한국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섬유 및 의류,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표 2〉 한·중 FTA가 충남의 대중국 주요 교역에 미칠 업종별 영향

산업	관세율		한중FTA의 효과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2013년, 억불)	
	한국	중국		수출	수입
전기전자	3.4%	8.1%	•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나, 중국 투자 외국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한 수출도 증가 예상	216.76	1.73
화학제품	5.93%	6.20%	• 한국의 기술 우위 및 중국의 수요 급증 등을 감안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 단,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증가 예상	53.54	4.89
기계	6.56%	8.62%	•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33% 가량 높아 한국의 수출 확대 예상 ※ 양국 모두 범용제품을 주로 생산. 단 한국은 high-end, 중국은 low-end 제품 생산에 경쟁력 보유	12.12	2.34
자동차 및 부품	8%	12.49%	• 중국: FTA에 따른 관세철폐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되, 한국의 대중 투자는 감소 예상 • 한국: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중투자가 지속될 전망	9.28	1.61
철강	2.5%	6.56%	• 중국의 상대적 고관세 감안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 단,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를 감안시 그 폭은 변화 가능	1.21	3.53
비철금속	6.27%	6.48%	•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이 내수 충족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 감안시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	0.70	1.10
성유 및 의류	9.98%	11.40%	•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증가 예상 - 단, 고부가가치 품목관련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0.38	0.97

자료: 외교통상부, 한중FTA 신관학 공동연구 보고서(2010.8) 및 한국무역협회

## 충청남도의 대중국 통상경제 전략

한·중 FTA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긴밀해지면서 “환황해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중 FTA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지방 정부 역시 새로운 대중국 협력 모델과 통상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에 있어 미래의 먹거리를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새로운 먹거리는 중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한·중간 분업구조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가공기지에서 내수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중국내 시장과 생산구

## 특집2 \_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와 과제

조가 바뀌면서 보다 high-end의 융합기술이 체화된 부품과 소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산업구조와 기반 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충청남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약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융합전자기기, 융합 기계부품 등 대표 주력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미래 수요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중국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지역경제구조를 바꾸게 될 대대적인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전략들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의 지역경제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실크로드(一帶一路) 전략, 중부 굴기 전략, 서부대개발 전략, 동북진흥 전략, 신형도시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역 협력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해 지역 중심 협력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전략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셋째, 쌍방향 협력과 경쟁 확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중 협력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일방적 협력이었다면, 한·중 FTA 체결 이후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 상품의 공세로부터 국내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이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배가해야 한다.

